

장영진 사장 “생산적 금융 확대 등 무역보험 275조 목표”

무역보험공사 신년 간담회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대폭 강화
3000억 규모 특해보증 공급 계획
디지털혁신 기반 업무 효율화 속도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올해 무역보험 지원 목표를 275조원으로 설정하고, 대미 투자 지원과 수출시장 다변화, 중소·중견기업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통상 위기 돌파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를 경신, 275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보는 지난해 총 268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해 우리나라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에 기여했다.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지원 규모는 109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장 사장은 “우리 경제의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

근간인 중소·중견기업 지원 또한 매년 확대하여, 작년에 역대 최대인 109조원을 지원했다”며 “올해는 114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생산적 금융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장 사장은 “무역보험기금을 출연하는 대기업과

은행이 추천하는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충분한 금융을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공급망 경쟁력을 되살릴 것”이라며, 대기업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인 ‘수출 공급망 강화보증’의 지원 산업을 자동차·철강·조선에서 플랫폼, 푸드, 뷰티, 방산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과 연계한 ‘수출패키지보증’도 출연재원 확충을 통해 저금리·고한도 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기업을 위한 특례보증도 대폭 늘린다. 장 사장은 “지난해 특례보증을 2024년 73억원 대비 약 30배 증가한 2143억원 지원했고, 올해는 3000억원을 공급해 수출금융의 사각지대를 없애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 합의 이후 증가하는 대미 투자 수요와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에도 무보의 역할을 강조했다. 장 사장은 “무보가 가진 30년의 프로젝트 금융지원 노하우와 인적·물적 인프라를 총동원하여 미국발 발주수요를 우리 기업들이 선점하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아세안·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보험 공급을 62조원에서 66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방산과 AI·신재생에너지 등 전략 미래산업 지원도 병행한다. 장 사장은 “방

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K-방산 정상 외교와 연계한 CEO 마케팅을 실시하고, 수입국의 현지화 요구에 부응한 현지 생산거점 건설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진짜성장’ 구현을 위한 AI 산업 전 주기 및 신재생에너지 금융 수요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보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화에도 속도를 낸다. 장 사장은 “‘AI 선도기관’으로서 관련 조직을 본부로 격상하는 등 조직개편을 마쳤다”며 “다양한 정보를 플랫폼에 담아내고, 다이렉트 상품에 AI를 접목해 고객 만족의 차원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재편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에도 우리 수출이 순항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식품부, 농업·농촌분야 설 민생안정 대책

성수품 공급 1.7배 확대... 500억대 할인지원

배추 등 13개 품목 최대 40% 할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확대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 공급을 평년대비 1.7배로 확대하고 500억 원대의 할인 지원도 실시한다. 특히 사과·배·한우·계란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대책을 가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업·농촌 분야 2026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설 3주 전부터 평년대비 1.7배인 17만1000톤(t)으로 늘린다. 사과와 배, 배추, 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이다.

농산물의 경우,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4배 공급을 늘리고 마늘은 정부 비축 물량 28%를 대형마트에 직공급한다. 축산물은 도축장 주말 운영과 농협 계통 출하 확대를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통해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늘리고, 임산물에는 산림조합 보유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10배 넘게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할인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 성수기 할인 지원에 총 566억원을 투입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19일간 배추, 무,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13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 판매를 추진한다. 쌀은 20kg 기준 최대 4000원 정액할인 방

식으로 지원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참여 시장을 200곳으로 확대하고, 농산물상품권은 지역별로 고르게 배정해 고령자 우선 구매 기간을 운영한다. 농협과 자조금단체, 유통업체도 자체 할인행사에 참여해 사과, 배, 한우 국거리, 계란 등에 대해 최대 65% 특별 할인을 추진한다. 과일·축산물·전통주·홍삼 선물세트는 최대 50% 할인 공급하고 혼합과일세트 공급 물량도 10만 세트에서 20만 세트로 늘린다.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활동도 강화한다. 농촌돌봄활동지원사업과 농협 행복채우미를 활용해 안부 확인과 반찬 나눔을 실시하고, 난방유는 리터(ℓ)당 30원 할인 공급한다. 아울러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다음 달 13일까지 원산지표시 단속과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도축장 위생 점검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집중 소독과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노동부, ‘가짜 3.3’ 위장고용 적발

김영훈 장관 “감독활동 강력히 실시”

근로자 수십 명을 사업소속자로 위장해 고용해 온 대형 음식점이 고용노동부의 집중 감독에 적발됐다. 정부가 ‘가짜 3.3’ 위장 고용을 겨냥한 전국 기획 감독에 착수한 이후 첫 공개 사례다.

노동부는 28일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 결과, 서울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이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소셜미디어에서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며 최근 급성장한 곳으로, 30대 최고경영자(CEO)와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는 감독 청원과 임금체불 등 다수의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업체를 ‘가짜 3.3’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해 조사를 진행했다. 감독 결과, 이 사업장은 음식 조리과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52명 중 38명(73%)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노동관계 법

령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조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연차휴가 미부여, 계약서류 미보존 등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 등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로 둔갑하거나, 근로자임에도 오분류 되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활동을 강력히 실시해 나가고,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수부, 인천·경기 연안 야간조업 규제 개선

2399㎞ 규모 어장 확대

인천·경기 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지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제한해 온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4배에 달하는 2399㎞ 규모의 어장이 확대된다.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척의 어선이 연간 3100톤(t)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해 연간 136억 원의 추가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해 연안해역에서 조업하는 인천과 경기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공정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전면 개편

가맹본부-점주 간 정보 비대칭 해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가 창업 희망자가 핵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본’과 ‘개설·운영·종료’ 생애주기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

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이다. 기존 항목 나열식 구조에서 벗어나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설·운영·종료)으로 목차를 재구성하고, 가맹 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핵심 정보를 요약본 형태로 먼저 제공한다. 이를 통해 브랜드 간 비교·선택이 쉬워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안전보건공, ‘추락안전매트’ 대중화 시동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신규품목 도입

한국안전보건공단(안보공)이 산업현장의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안전매트’를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신규 지원 품목으로 처음 도입한다.

안전보건공단은 28일 추락 시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 부상을 경감할 수 있는 ‘추락안전매트’를 클린사업

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16일 재정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규 품목 도입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며 추락안전매트를 현장에 도입하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3월 중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